

---

## 시민인권선언 <헌법1조에 인권의 댓글을 달자>

---

"초록국화" 

2008년 7월 23일 오후 7:26

### 시민인권선언 <헌법1조에 인권의 댓글을 달자>초동 회의 결과

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걸로 압니다.

7월 21일 촛불기획팀 회의에서 초초안 정도가 나왔는데, 꼭 한 번 읽어봐 주세요!!!

**‘초기 제안자 모임’이 7월 26일(토) 3시 사랑방에서 있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 꼭 참석해 주세요.**

#### 1. 이름이 뭐지?

시민인권선언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촛불시위에서 터져 나온 ‘헌법1조 국민 주권’의 시민 권리 요청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. 한편 ‘국민주권’이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그것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거기에 촛불에서 이야기된 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시민인권으로 재구성해야 하겠죠. 후자를 통한 인권운동의 기획이 풍부하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.

그래서 이름은 <헌법1조 인권의 댓글을 달자>로 정했어요. (이 문서에서는 편의상 ‘인달자’로 줄여 쓸게요. ^^;)

#### 2. 주체는 누구?

주체 형성은 단계별로 그림을 그렸어요.

① 먼저 ‘인달자’의 초기 제안자 그룹을 개인별로 받습니다. 인권단체 활동가가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하고, 촛불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인터넷카페 운영자 등으로 조직합니다. 20-30명 정도의 규모로 이들은 ‘인달자’의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실무도 함께 추진합니다. ‘머리’와 ‘발’이 모두 필요합니다.

② 초기 제안자 그룹들이 모여 토론회를 엽니다. △ 구체적 기획과 로드맵 △ ‘인달자’에 담을 인권 의제 △ ‘인달자’에 있어서 파생되는 쟁점(세계인권선언과의 관련성, 헌법개정 운동 등등) △ 역할분담

③ 온/오프라인을 통해 <‘인달자’ 씨알 만들기(가칭)>로 시민들의 참여를 만들어 냅니다. 물론 초기 제안자들도 씨알에 참여합니다.

\*\* 선언문을 누가 쓸 것인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

## 2. 어떻게 만들 것인가?

① 아래로부터 참여하고 만들어내는 ‘인달자’가 되어야 합니다. 유엔을 포함해 이미 나와 있는 인권조약, 규약 등 이미 인권문헌은 정말 많이 있지요.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서 인권을 실현하는 구속력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. 시민들이 잘 모르기도 하구요. 그래서 촛불이라는 시민경험을 경과해 나온 ‘인권적 요청’들, 물론 매우 거칠고 날 것이죠, 이런 것들을 모아서 ‘인권’이라고 선언하는 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.

② 광장토론회와 현장토론회를 엽니다.(토론회라는 이름은 좀 재미가 없어서 생각을 더해야겠지요^^) 광장에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. 한편 비정규직 사업장, 장애인 투쟁 현장, 언론수호 현장 등 mb식 신자유주의 독재로 인해 투쟁현장은 나날이 늘어날 것입니다. 거기로도 ‘인달자’는 출장을 가서 ‘인권 댓글’을 모아오려고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제안자 그룹의 실무력이 많이 필요하겠죠.

③ 모아진 ‘인권댓글’을 정리하고 심의하고 토론해서 ‘시민인권선언’으로 발표합니다. 이 과정의 주체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

## 3. 기간은 얼마나?

12월 10일을 선언일로 삼았습니다. 좀 길지만 아래로부터 ‘인달자’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도 숨가쁩니다.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라 벌써 인권위는 잔치를 시작했고, 뉴라이트 대표 제성호가 인권대사로 임명되었어요. 기념일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선언으로 이 날을 호명해 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

완성된 시민인권선언 발표로 끝나는 건 아니고 청원행진과 새로운 시민인권선언 ‘탄생에 걸맞는 직접행동’으로 시민들의 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.

\*\* ‘인달자’가 세계인권선언과 어떤 관계인지는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. 제안자 그룹회의의 한 의제일 것입니다.

## 4. 실천활동은 없나?

실천활동 즉 다양한 직접행동을 토론하고 제안하고 함께 해야 생명력이 이어질 것입니다. 특히 광장토론에서는 인권댓글과 함께 구체적 실천이 제안되고 토론되어야 할 것입니다.

## 5. 개헌 정국에선 어떻게?

‘인달자’는 개헌을 주도하는 운동은 아닙니다. 그러나 수구세력의 개헌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‘인달자’를 무기로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. 올해 안으로 정치권의 개헌 주도가 가시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.

## 6. 또 알아야 할 건 없나?

구체적 기획이 더 궁금하시죠? 광장토론회 기획을 ‘명숙’이, 초기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 기획은 ‘래군’이 하기로 했어요(듣자하니 한겨레21에서 꽤 관심이 많다는군요). 제안자 모임(26일)에 오시면 낱알이 아실 수 있을 듯 합니다.

=====  
=====

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 '인달자' 논의 경과를 알려드립니다.

## 논의 경과

### ● 6월 18일 <인권활동가 2차 집담회>

; 6월 10일 스티로폼 직접행동 평가와 함께 '직접민주주의행동 구름단(가칭)'이 촛불기획팀에서 제안됨. 직접행동 기획팀인지 직접민주주의 사업팀인지 아직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음. 이 제안에 대해서는 <촛불기획팀+인권회의 운영진>에서 논의해서 안을 가져오기로 함.

### ● 6월 25일 <촛불기획팀+인권회의 운영진 회의>

; 김정아 <헌법1조 권리의 댓글을 달자>, 박래군 <2008 시민인권선언> 두 개의 기획안이 제출됨. 두 기획을 보완적으로 통합하고 표제는 <헌법1조 권리의 댓글을 달자>로 함.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.

### ● 6월 28일 : 프레시안에 <헌법1조 권리의 댓글을 달자>는 제안문 기고함.

### ● 7월 2일 <인권활동가 3차 집담회>

; 촛불 이후를 준비하는 운동으로 시민인권선언 <헌법1조 권리의 댓글을 달자>를 준비하자는 논의 진행되었음. 7월 17일 시작일로 삼자는 의견 있었으나 집행되지 못함. 괄호 안 집담회 결과 참조.

((촛불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후를 준비하는 운동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제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. 다양한 권리 침해의 내용을 듣고, 권리 실현을 망라해야 한다는 의견과 촛불 안에 있는 아직 인정 받지 못한 시민권자들에게 대한 호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. 또 세계화와 경제위기, FTA 등 구조적 문제가 중심에 서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어요. 중심과 내용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.

기존에 제안된 두 개(정아 래군)의 안을 통합하고 다음주까지 인권단체 명의로 제안서를 돌리기로 했어요. 7월 17일을 시민인권선언 운동 선포의 날로 정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))

### ● 7월 13일 <촛불기획팀 회의>

; 대략의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상상력 수다 회의를 폭넓게 갖고자 했지만 일정 등이 너무 촉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함. 괄호 안 회의 결과 참조.

((- 비정규직 사업장, 교육현장 등 현장을 찾아다니며 만들어 내는 인권선언(전국투어 방식)

- 지역공동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곳을 거점으로 인권선언을 만들어 내는 방식

- 주1회 정도 인권선언 토론회, 증언대회 등을 9월까지 하고 몇 번의 합의와 정리하는 징검다리 행사를 갖고 12월 10일을 기점으로 발표

- 하반기 정세(특히 경제문제)가 요동칠텐데 인권선언만 가지고는 힘이 약할 거 같고, 구체적인 투쟁도 함께

- 단체들의 연합 활동은 현재 관심이나 일정 등이 쉽지 않은 거 같으니 열의있는 개인들이 만들어 내는 방식

- 열의있고 시간이 가능한 초동주체 10만 있으면 좋겠다.

등등 방향과 방식, 아이디어, 고민들을 풀어냈습니다. 원래 계획했던 시민인권선언의 로드맵까지는 만들지 못했구요. 7월 25일 광장토론(이름은 아직 안 정했어요. 광장토론은 좀 재미없잖아요)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어요.

토론회는 이제까지 촛불봉기에서 나왔던 시민들의 권리적 요청을 의제별로 한 번 모으고 정리하면서 토론하는 걸 기본 뼈대로 했어요.

의제는 <민영화> <교육자율화> <언론탄압> <공안탄압> <비정규직> <직접민주주의> 등이 있는데, 좀더 잘 분류화 할 필요는 있겠지요.

활동가들이 발제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토론하는 광장토론입니다. 청계광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, 거기서 밀리면 파이낸스 호텔 앞이나 언론회관 주차장 등 촛불봉기가 주로 일어났던 곳을 최대한 사수한다는 겁니다.))

#### ● 7월 15일 <촛불기획팀+관심있는 사람>

; 13일 회의에서 분류한 의제를 인권분류해 봄. 거의 모든 인권의제가 망라되어 있음. 7월 25일 광장토론은 전체상이 아직 안나오고 준비도 부족해서 연기하기로 함. 괄호 안 회의 결과 참조.

((지난 회의(15일)에서는 의제별로 인권분류를 해보았지요. 거의 모든 인권이 촛불 안에서 다 이야기되고 있었어요. 그리고 시민인권선언과 관련된 각자의 의견을 나눴는데,

<->

- 기존에 있는 유엔 문서보다 더 다른 이야기가 없을 것이며, 더 급진적이지도 않을 거 것이다.
- 선언이라는 방식이 발표하는 것 외에 현실을 변화시키는 강제가 없으므로 공허할 것이다.
- 시민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별로 없는 운동이다.
- 선언하고 난 다음에 뭐 할거냐? 유엔으로 보내냐? 국민들에게 프린트 해서 나눠주냐?
- 광장에 나간다고 조직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.
- 좀 낮은 감이 있다.

<+>

- 선언이 변혁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하다.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을 급진적으로 실험하는 시민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하고 만들게 하자.
- 유엔의 인권기준이 되는 각종 선언도 최종적으로는 민중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만드는 데 시민인권선언도 그렇게 가야 한다.
- 광장토론은 아직도 유효하다.
- 헌법1조에 권리의 댓글을 달자는 기획은 좋은 기획인데 이걸 살리는 방향으로 하자.
- 주민소환운동 하는 카페운영자를 만나봤는데, 상당히 매력 있는 운동이더라, 우리가 조직을 하기 힘든 것도 있고, 네트워킹이 중요하니 그들과 함께 선언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하자.
-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듣자. 근데 집담회 하자고 해도 잘 안모여지니 단체들 일대일로 만나는 간담회를 해서 우리 구상도 설명하고 의견도 들어서 보완하자.
- 주민소환운동과 청소년인권토론회가 토요일에 있으니 모두 참석하자.))

● 7월 19일 <주민소환운동 강연회 참가>

; 오세훈 시장에게 시정을 내놓으라는 글을 미류가 돌렸음. 소환운동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방식임.

((주민소환운동 강연회에 미류, 명숙, 정아가 다녀왔어요. 한 30여명 모였는데 하남시 주민소환운동 사례 강연과 질의, 응답이 있었어요. 아직 많이 조직되지도 구체적인 전술이 나온 것도 아닌 상태더군요. 하남시는 광역화장장 반대라는 구체적인 명분과 타겟지점으로 주민을 조직할 수 있었는데, 오세훈은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더군요. 지금 시의원들의 부정행위도 오세훈과 직접성이 없고. 게다가 서울시는 단위가 너무 넓어서 80만명 이상이 소환에 서명해야 소환투표가 가능한데, 그것도 쉽지 않구요. 선관위와 시 측에서의 방해공작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랍니다.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의원 몇 명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선회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해요. 암튼 그들도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카페운영진 정도가 움직이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

시민인권선언을 함께 하려면 우리가 그들을 좀 더 잘 파악하고,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 안을 내놓지 않으면 좀 뻔~ 한 제안을 하는 걸로 볼 거예요.)) <끝>

---

 선언회의경과및결과723.hwp  
35K